

▣ 박근종 칼럼

국가채무 이지만 연간 30조 원, 커지는 확장재정의 무게 극복해 내야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 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초가 뚜렷해지면서 국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국가신용등급 하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 재정'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18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 2,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13조 2,000억 원이 소요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까지 더해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300조 6,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나랏빚) 증가 속도가 잠으로 무섭다.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164조 원이 늘었고, 이명박(143조 원)·박근혜(183조 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선 가장 많은 442조 원이나 급격히 늘었다.

국가채무가 높아나도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을 가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 |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그칠 것인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로 이어져 기업의 쇠퇴, 고용·투자 저하라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암울한 상황이다 보니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떠오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올 연말 1,300조 원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지난 2022년 사상 첫 1,000조 원대 돌파 이후 불과 3년 만에 20%가량 폭증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제 이자로 부담한 비용(결산 기준)은 28조 2,206억 원으로, 2000년의 18조 6,426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0조 원(51.4%)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 국제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총예산 673조 원의 4.4%나 되고 국방비 한 해 예산(61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달한다. 코로나 19 당시 지출이 커지면서 국제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2021년

19조 2,000억 원이 되더니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민 1인당 약 60만 원쯤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대규모로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 규모의 국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면 차환 발행 압박은 더욱 커지고 가중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2024년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데다 내년이면 50%를 넘어설게 된다.

재정 건전성 약화는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저하로 이어진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채무 증가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국민 경제로 돌아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 재정 질약 간담회'에서 "국가 살림을 하라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고 민이 많다"라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농사에 비유해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라며 "지금 씨를 한 뭉치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겠다"며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은 당장 경기 대응 긴요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채 이자 비용 부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향후 수년간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차환 발행이 채권 시장에 쏟아지며 금리 상승 압력과 이자 부담을 키울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세입·세출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단기 자금이 올해 1~7월에만 114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정부 재정이 쪼들리면서 적자(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를 넘어 서며 재정준칙(3%)을 훌쩍 넘어섰다.

무엇보다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는 '인위적 축소'라며 확장재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 결과 5

년 만에 국가부채가 442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최근 정부는 13조 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추가 발행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변수인 엔 틀림이 없다. 여기에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까지 완화해 대규모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와 국비를 각각 현행 500억 원·300억 원에서 1,000억 원·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기준금액 상향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이어지는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차 없는 도로, 고추 말리는 공방'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장이 없음을 각별 유념해야만 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 원의 절반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 확충으로 94조 원, 강도 높은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부진이 3년째 이어지고 단기 차입까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 8,000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크게는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의 사정이 여의롭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지난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일시 차입한 자금은 누적 기준으로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105조 1,000억 원보다 8.4%인 8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재정 건전성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확장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도 당연히 필수적이다. '벌려 쓰는 씨앗'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기능을 할지, 오히려 재정 상황만 악화시키는 장애물 역할이 될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각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착화하는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확장 기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벌린 씨앗을 당장 배고픔을 달랠 식량으로 사용돼 버리거나 척박한 불모지에 뿌리지 않고 기름진 옥도에 뿌리도록 하는 정부의 해안과 안목이 더 중요하다.

일관성이 내포된 1회 용에 그칠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투자에 집중해야만 한다. 확장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다.

씨앗을 뿌리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려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제대로 일구고 갈아엎는지부터 확인해야만 한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포증하는 국가채무에 손 놓고 방치(放置)해 버리거나 방기(放棄)하고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빛을 늘리기에 앞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는 지출 구조조정부터 나서야 한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두는 '선택과 집중'은 물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쓰기 쉽고 흥청망청(興淸亡淸) 쓰다가 미래세대에 빛의 굴레를 씌우는 차등(差等)의 우(愚)는 재정 파탄(廢墜)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고령화·저성장으로 연금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되 소비 측면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해야만 세수 확충으로 이어져 재정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역대 정권마다 씹씹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가 빈말로 끝난 '재정 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언제 현실화할지 모른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꾀하되 최후 수단인 데야만 한다.

작가 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공원에서 아름다운 결혼 어때요? 서울시, 정원결혼식 20개소로 확대

남산뷰, 한옥뷰, 공원뷰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신규 웨딩 공간 11개소 확대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 '한남스카이 웨딩가든', 9월 27일 하반기 첫 예식 진행

예비부부·하객 수요 반영, 도시락 및 케이터링이 가능하도록 피로연 기준 완화

서울시는 자연 속에서 특별한 친환경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원결혼식 가능한 웨딩가든을 기존 9개소에서 총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전역에서 아름다운 정원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웨딩 트렌드 변화로 도심 속 야외 결혼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산한남자락·서울숲·서울식물원 등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갖춘 신규 웨딩가든 11개소를 새롭게 운영해 기존 9개소와 함께 총 20개소 운영으로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 (기존 9개소) ▲ 어린이대공원 포시즌가든 ▲ 매현시민의숲 ▲ 용산가족공원 ▲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 선유도공원 ▲ 북서울꿈의숲 ▲ 초안산 하늘꽃정원 ▲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 솔밭근린공원

○ (신규 11개소) ▲ 남산 한남자락



▲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 ▲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 남산 호련당 ▲ 남산 장충자락 ▲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 ▲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 푸른수목원 잔디마당 ▲ 서울식물원 사색의정원 ▲ 서울숲 설렘정원 ▲ 서울숲 승마훈련원 부

지 20개소 중 시설 보수가 필요한 5개소는 서울시가 예산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운영 장소 중 수용 하객 인원이 높아 예비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 북서울꿈의숲 웨딩가든·노후된 야외피로연장 보수공사를 2025년

높이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도 당연히 필수적이다. '벌려 쓰는 씨앗'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기능을 할지, 오히려 재정 상황만 악화시키는 장애물 역할이 될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각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착화하는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확장 기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벌린 씨앗을 당장 배고픔을 달랠 식량으로 사용돼 버리거나 척박한 불모지에 뿌리지 않고 기름진 옥도에 뿌리도록 하는 정부의 해안과 안목이 더 중요하다.

일관성이 내포된 1회 용에 그칠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투자에 집중해야만 한다. 확장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다.

씨앗을 뿌리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려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제대로 일구고 갈아엎는지부터 확인해야만 한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포증하는 국가채무에 손 놓고 방치(放置)해 버리거나 방기(放棄)하고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빛을 늘리기에 앞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는 지출 구조조정부터 나서야 한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두는 '선택과 집중'은 물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쓰기 쉽고 흥청망청(興淸亡淸) 쓰다가 미래세대에 빛의 굴레를 씌우는 차등(差等)의 우(愚)는 재정 파탄(廢墜)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고령화·저성장으로 연금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되 소비 측면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해야만 세수 확충으로 이어져 재정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역대 정권마다 씹씹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가 빈말로 끝난 '재정 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언제 현실화할지 모른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꾀하되 최후 수단인 데야만 한다.

작가 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인천시, 찾아가는 전통공연

'열쑤' 9월에 이어간다

9월 매주 일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속 전통공연의 향연



이가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체험부스와 공연 말미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동놀이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세 번째 공연은 9월 21일 오후 4시 미추홀구 인천도호부관이에서 열린다.

생기복덕과 시 무형유산인 범패와 작법무가 어우러져 조선시대 행정관청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의 깊은 정취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9월 28일 오후 4시 월미도 갈매기흠에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전통공연 '열쑤'의 폐막 공연은 명불허전 소리꾼 남상일과 국악그룹 보소(BOSS5)의 협연으로 시민들에게 전통예술의 흥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미를 장식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누리집(<https://www.incheon.go.kr/culture/CU030204/30310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공연 관람하기 좋은 가을 주말의 오후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겸 전통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예술 발전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5년 찾아가는 전통공연 열쑤'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연은 9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총 4회로 구성된다. 국악과 관소리, 시 무형유산 공연 등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전통공연을 구성해 상반기의 공연 열기와 흥을 이어간다.

첫 공연은 9월 7일 오후 4시에 연수구 솔찬공원에서 열린다. 인천 출신 경기소리꾼 전영랑과 국악 그룹 앙상블 더류가 함께 꾸민 국악 하모니 무대로 시작된다.

이어 9월 14일 오후 4시 풍물의 고장인 부평 삼산분수공원에서는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팀 '유희스카'와 시 무형유산인 부평두레놀이

충남도, 생태관광 컨설팅 대상지 선정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사업 대상지로 보령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보령시 등 총 3곳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 강화 △지역역의체 운영 방법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다.

보령시는 웅천읍 독산이 해안에서 황교리 해안까지 길이 2km의 해안사구로 국내 유일하게 전체 원형이 보존돼 있는 소항사구가 위치한 곳이다.

소항사구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목물떼새, 물수리, 수달, 표범장지범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보전 가

치가 매우 높은 자연 생태계 보고이다. 원산도, 고대도 등 생태관광 콘텐츠와 연계 가능한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소항사구 생태탐방로, 무창포 담벼슬성, 생태마을인 독산마을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보령호 생태공원, 보령호-빙도 국가 생태탐방로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처럼 보령시는 생태관광자원, 우수한 접근성,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갖춘 만큼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이 시급했다.

이에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충남연구원과 합동으로 서해안 선셋조망대 조성과 연계한 자연자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평가위원단의 대상지 현장 확인에 적극 대응한 바이다.

이현진 기자

	www.thesegeye.com 7차제본: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규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